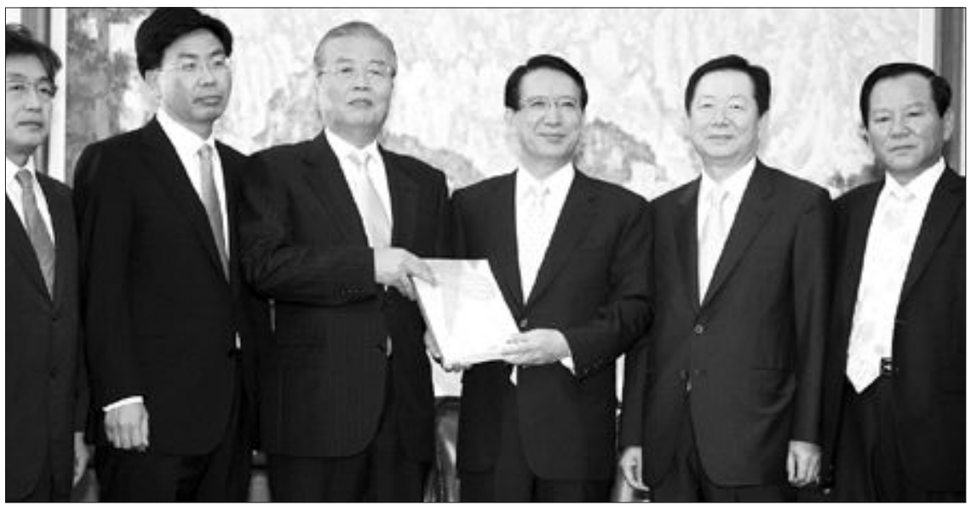
■ 헌법자문위 개헌안 내용과 전망

이원정부·4년 중임제 복수안 제시

국회 양원제… 입법부 권한 강화

정치권 개헌론 공방 거세질 듯



김형오 국회의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헌법연구자문위 김종인 위원장으로부터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담은 개헌안 최종 보고서를 전달받은 후 위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헌법연구자문위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개헌안은 새로운 권력구조 설계, 기본권 강화, 선진 일류국가 도약 등을 위한 비전을 구체적으로 담았다는 평가다.

자문위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 행정권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분점하는 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 정·부통령제의 복수안을 제시하고 현행 단원제를 상하 양원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 개헌논의는 본격화할 전망이다.

◇권력구조 개편=자문위가 제시한 새로운 정부형태 중 하나는 이원정부제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는 만큼 그 권한을 대통령과 국무총리로 분산시킨다는 것이다.

이원정부제안에 따르면 직선으로 선출될 5년 단임의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회에서 선출한 전쟁선포권, 계엄권, 긴급명령권, 사면권, 국회(하원) 해산권, 국민투표 부의권 등을 갖는다.

권력을 분점하는 국무총리는 국회(하원)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되며, 행정수반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 치안, 경제정책, 국방 등 일상적인 국정 전반에 대한 통할권과 내각구성권을 행사한다.

4년 중임 정·부통령제는 권력분립적 내용을 강화한 대통령제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임시국회 소집요구권,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예산법률주의 도입, 국회(하원)의 대법원장, 대법관, 헌재소장 선출권 부여 등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일정부분 국회로 넘겼다. 부통령은 대통령 궐위·사고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국회는 '양원제'로=자문위는 국회 개혁의 상징적 조치로 상.하 양원제를 제시하고 입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개헌안에 따르면 임기 4년의 하원은 직선으로 4년마다 전원교체되며, 임기 6년의 상원은 직선으로 2년마다 3분의1씩 교체된다.

양원제가 도입되면 각 원에서 발의된 법률안은 원칙적으로 양원에서 의결돼야 법률로 확정된다.

각 원이 발의된 법률안을 우선 심의.의결한 뒤 다른 원에 송부하는 방식이다. 만일 상원과 하원이 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양원협의회에서 단일안을 만들어 각 원에서 의결하도록 했다.

또한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고 국회 내에 독립성을 갖춘 회계검사기관을 설치토록 했으며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해 국회의 예산편성권을 보장했다.

◇향후 절차와 전망=자문위의 개헌안이 성안됨에 따라 정치권내 개헌론이 불붙을 전망이다.

특히 자문위가 바람직한 개헌 마무리 시점으로 '2010년 지방선거 이전'을 제시한 데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주장하는 등 속도를 높여가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지방선거를 넘기면 정치권 전체가 사실상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개헌 논의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헌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올해말이나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치권내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심대평 탈당에 정치권 '출렁'

'선진과 창조' 교섭단체 상실

다시 한나라-민주 양당 체제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의 탈당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당장, 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공동 교섭단체인 '선진과 창조의 모임'의 의석수가 20석에서 19석으로 감소,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그동안 여야의 쟁점 현안과 관련, 캐스팅 보트를 쥐고 완충지대 역할을 했던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3개 교섭단체 구도가 무너지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치가 더욱 격렬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한나라당은 보수 성향의 동질성이 있었던 선진당이 교섭단체 자격을 잃음에 따라 향후 선거구제 개편 및 개헌 등을 통해 정국 구상에 다소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특히, 선진당이 심 대표 탈당 직후 "참 나쁜 정권, 참 나쁜 사람들"이라며 여권에 각을 세운 만큼 당분간 한나라당과의 불편한 관계도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은 선진당의 교섭단체 지위 상실로 양강 구도가 재정립됨에 따라 제1야당의 위상이 높아질 것을 예상하며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여기에 선진당의 내분과 한나라당에 대한 충청 민심의 반발 등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자유선진당을 탈당한 심대평 전 대표는 지난달 31일 청와대가 자신을 총리후보로 검토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정식이든 비정식이든 당과 사전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심 전 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선진당이 세종시 문제와 함께 제시한 강소국 연방제 같은 조건들에 대한 이견 때문에 총리 합의를 해주지 않은 것 같다"며 "헌법사항이고, 유연하게 생각해야 할 것을 굳이 조건으로 내건 것은 명분에 집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이 총재를 비판했다.

또, 향후 입각 가능성에 대해선 심 전 대표는 "총리로 가기 위해 당적을 버린 것이 아니라 선진당의 변화와 전국정당화를 위해 당적을 버린 것"이라며 "(입각 생각은) 당연히 없다"고 답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무주택 근로자에 전월세 소득공제 도입"

이용섭 의원 법 개정안 발의

이용섭 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은 지난달 31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 전세보증금 및 월세를 소득세 과세시 비용으로 인정하는 '전월세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의 50% 또는 전세보증금 월세환산 금액의 50%며 공제한도는 600만원, 임차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다.

이 의원은 "일자리 감소와 내수경기 침체로 무주택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무주택 근로자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경찰 즉결심판 청구때 피의자에 설명 의무를"

우윤근 의원 법 개정안 발의

우윤근 민주당 의원(광양시)은 지난달 31일 경찰이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 피의자에게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즉결 심판은 일반 재판과는 달리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도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 측에 상당히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그동안 즉결심판 청구시 피고인에게 그 내용과 불복 절차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었다.

우 의원은 "즉결 심판에 넘겨지면 대부분 벌금, 구류 등을 선고받게 되고 무죄는 1%도 되지 않은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결찰이 즉결 심판을 청구하기 이전에 피고인에 상세한 설명을 하는 조항을 새로 신설했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

'박준영 지사 총리설' 주목

늦어도 4일까지는 개각이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무총리 최종 후보군에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포함됐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지사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일부 언론은 지난달 31일 총리 후보군과 관련, 강현욱 전 전북도지사와 김종인 전 의원 그리고 새로운 인물 2~3명이 최종 후보군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들 언론은 특히 새로운 인물에 박 지사가 포함됐으며, 이명박 대통령과 비교적 가까운 야권 인사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통합·화합의 국정 철학을 살린다는 인사 취지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호남인사가 중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배경설명도 곁들였다.

하지만, 박 지사는 이에 대해 '언급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에서 정식으로 제의를 해 온 것도 아닌데다, 만약 제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현직 도지사로서 F1 자동차경주대회와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조성사업(J프로젝트), 2012여수세계박람회 등 산적한 현안이 급선무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이희호 여사, 각계 조의에 감사 편지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는 지난달 31일 국장에 참여한 장의위원 2천371명에게 편지를 보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여사는 감사 편지에서 "남편을 떠나보내는데 많은 슬픔과 애통함이 있었지만 따뜻한 위로와 격려에 큰 위안을 받았다"며 "국장을 검소하면서도 질서정연하게, 엄숙하면서도 평화롭게 끝마칠 수 있도록 협력한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고 DJ 측 최경환 비서관이 전했다.

이와 함께 DJ의 차남 김홍업 전 의원과 한광옥 한화갑 전 의원 등 동교동계 인사, 최 비서관은 이날 이 여사를 대신해 정진석 추기경, 조계종 총무원장인 지관스님, 한기총 대표인 엄신형 목사 등 입원 및 장례기간 찾아준 종교계 지도자들을 잇따라 예방해 사의를 표했다.

김홍업 전 의원은 "아버지는 병중에서도 화해와 용서, 화합, 남북대화가 열리는 계기를 만드는 등 마지막 순간까지 할 일을 다했다"며 "국장이 작은 소동도 일어나지 않고 마무리된 것에 감사드리며, 어머니도 많은 안정을 되찾았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